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조은정 ejrcho@inss.re.kr
최용환 yonghwan@inss.re.kr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 조은정 · 최용환

INSS 연구보고서 2022-21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조은정 · 최용환

INSS 연구보고서 2022-21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조은정
최용환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조은정
최용환

조은정 (趙恩廷)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rwick 정치학 박사. 지속 가능한 평화의 가능성을 지역통합의 차원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모색 중이다. 관련 연구로 “김정은 시대 북한 재난 거버넌스의 특징과 대북 정책에 대한 시사점”(Global NK 2021, 김태경 공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미 삼각협력의 가능성”(2020), 『북한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가와 관리방안』(2019, 오일석 공저), “북한 위협론’의 비판적 검토: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2018), “South Korean Views on Japan’s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Abe government”(Pacific Review 2018, 신기영 공저), “Nation Branding for Survival in North Korea: The Arirang Festival and Nuclear Weapons Tests”(Geopolitics 2017) 등이 있다.

최용환 (崔龍桓)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분야는 한반도 안보,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이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북핵과도기 한국의 안보 정책 과제와 쟁점』(2020),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1), 『안전한 국가를 위한 국가전략』(2022) 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6
I. 서론	8
1. 연구 목적 및 배경	9
2. 선행연구 검토	12
3. 연구 범위 및 구성	19
II. 미국의 대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위상 변화	22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	23
2. 동맹의 강조와 비용의 전가	26
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3. 미일동맹의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합성	34
가. 인도·태평양에서 미일 이익구조의 동조화	
나. 미일 인도·태평양 정책의 정합성	
III.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 회귀와 군사적 관여	42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위상의 재정의	43
2. 가치에 편승한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	52
3. 기착지의 모색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	57

IV. 인도·태평양시대 한국의 지전략을 위한 쟁점	62
1.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지전략 수립의 필요성	63
2.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문제	68
3. 인도·태평양 시대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변화	74
V. 결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제언	84
Abstract	92
참고문헌	96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한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지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함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데 있다. 미중 경쟁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 게임 역시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서양 지역에서는 NA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동맹 체제를 유지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한미·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다자동맹을 통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지역의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현재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EU), 이탈리아, 스웨덴, NATO 등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과거 대서양 세력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과 글로벌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성장한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지전략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 방위를 위해 설치된 일본 소재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대중군제

기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후방기지와 관련된 논의와 활동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한일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미중 전략경쟁과 겹쳐지면서 이른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서양 세력을 활용하여 전략적 융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지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대서양 세력, 미국, 유럽, 한미동맹, 한일관계, 유엔사 후방기지, 글로벌 중추 국가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1. 연구 목적 및 배경¹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질서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지전략 수립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리고, 지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는 데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전후(戰後)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무역 갈등으로 시작한 미중 전략경쟁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분리를 넘어 정치·군사적 영역 등으로 확대되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전략적 핵심 공간 가운데 하나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전략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태평양사령부의 책임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꾸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쿼드(QUAD)를 결성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과 대서양 동맹 간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미국·영국·호주가 연대한 오키우스(AUKUS)가 출범하였으며,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초대하였다.

이 밖에도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항행 자유의 원칙’을 지

¹ 본 연구는 2022년 9월 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후 발표된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자들은 특별히 본 연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신 두 분의 내부 검토위원(이성훈 책임연구위원과 김보미 부연구위원)과 네 분의 외부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하는 유럽 국가들은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어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해상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NATO의 핵심 세력인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진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에 더하여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이른바 대서양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관심과 관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방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즉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도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서양 세력의 선제적 대응이 인도·태평양 진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서양 세력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질서 변화가 유럽의 인도·태평양 재진출을 맞아 새삼스럽게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성격 때문이다. 19세기 영-러는 오늘날 미-중과 마찬가지로 패권 경쟁 구도에 놓여 있었으며, 그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크림반도(1853 ~ 1856), 아프가니스탄(1839 ~ 1842/1870 ~ 1880), 한반도(러일전쟁: 1904 ~ 1905) 등 세 곳이 지정학적 열점(熱點)으로 떠올랐다.² 21세기에 이 세 곳이 지정학적 열점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러 패권 경쟁하에서 러일전쟁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일본에 의한 영-러의 대리전으로 이해되나, 지역 수준에서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패권 야

망과 조선 침탈을 가속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9세기 국제 패권 경쟁 구도하에서 조선의 외교·안보적 노력이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전략 게임의 행위자로서, 한국의 전략적 경험치가 대서양 세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전략경쟁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은 세계 패권 경쟁 차원에서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임을 상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전략적 비전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주목할 것은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게임은 과거와 달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태평양에는 ‘힘의 각축’뿐만 아니라 ‘규범의 각축’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대중견제를 위한 열강 협조체제가 미국과 유럽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체제는 공유된 규범을 기반으로 한 명분 쌓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쿼드 국가들 간 협조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자유의 원칙’, ‘탈탄소,’ ‘성평등,’ ‘모성과 아동권의 보호’, ‘다양성의 존중’ 등과 같은 규범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물리적 침략전쟁이 아니라) 만국공법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민주주의 재건 등 가치 외교를 통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확보를 굳히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19세기 제국주의의 확대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힘의 관계와 지정적 조건, 그에 따른 국가들의 정치, 군사, 경제 이해관계 등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은 공통된 요인들로 인하여 과거에도 지금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는 의미다. 다수의 지정학적 열점 중 한 곳이 한반도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의미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여는 한국에게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서양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망해 보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첩되어 온 다양한 층위의 ‘구조적 뒤틀(structural entanglement)’을 극복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³

본 연구가 참고할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3) 한국의 지전략 구상. 2015년 이재현은 인도·태평양이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켜 “강대국들이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한국은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⁴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경쟁이 무역 경쟁에서 본격적인 체제 경쟁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미국의 대전략에서 달라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위상에 주목하였다. 가령, 손한별·이진기

(2018)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 미국의 전략적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변화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⁵ 김태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도전세력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이 다중영역작전(MDO: Multti-domain Operation) 개념을 도입,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⁶ 신성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 및 주요국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⁷ 김재관은 미중의 인도·태평양에서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갈등 구도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한국의 모습과 중첩된다고 보았다.⁸ 장호진은 이 같은 한국이 처할 딜레마에 대해 가치와 규범을 함께 구현하는 한미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중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⁹ 이 밖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에 따른 한국/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군사(한미동맹), 경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최신 문서 발표마다 업데이트하여 소개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 국가들의 현지 평가 및 유럽의 과거 식민지로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을 담지는 못하였다.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평가자에게 감사드리며, 지면상 후속 연구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4 이재현,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15.10.2.). <https://www.asaninst.org/contents/%EC%9D%B8%EB%8F%84-%ED%8D%BC%EC%8B%9C%ED%94%BDindopacific-%EC%83%88%EB%A1%9C%EC%9A%B4-%EC%A0%84%EB%9E%B5-%EA%B3%B5%EA%B0%84%EC%9D%98-%EB%93%B1%EC%9E%A5-2/> (검색일: 2022.9.7.).

5 손한별·이진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한국국가전략』 7호 (2018.7.), pp. 149-188.

6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63(1) (2020.3), pp. 89-116.

7 신성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95호 (2018. 가을), pp. 9-26.

8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33(2) (2018), pp. 265-300.

9 장호진,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한국국가전략』 18호(2022.3), pp. 129-149.

유사한 방법으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전해원은 2021년과 2022년 연구에서 각각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핵심3국의 인도·태평양에서 해상군사 활동 동향을 주시하고 공개된 문서를 검토하였다.¹⁰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이들 유럽 국가들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및 해양안보 협력, 경제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심성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에서 경제, 군사적 관여 현황과 동기를 분석하였다.¹¹ 임태훈·이은채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하여 경제 분야와 역내 안정 유지, 4차 산업혁명에서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¹² 김소연·권재범·박성윤은 2010년 이후 증대된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영국의 위협인식을 변화시켰으며 대중 위협인식의 상승은 영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¹³ 앞서 연구들이 군사 안보 및 경제 사안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함의를 살폈다면, 송지선은 개발협력 분야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¹⁴ 또한 개별국이 아니라 유럽공동체 단위에서 미국, 일본과의 비교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지역에서 개발협력에 대

한 함의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로 이기태의 2019년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서의 연구들이 개별 “행위자” 중심으로 연구했다면 이기태는 연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대 영국, 대 프랑스 안보 협력 “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으로 동진하는 가운데 일본을 중요한 안보협력국으로 여기고 일본은 이 같은 기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전통적 외교방식인 ‘전방위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⁵

이처럼 다양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분석들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한국의 지전략 제안에 방점을 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중 세 편을 소개하자면, 오승희·박창건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하에 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한반도를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⁶ 가령 안보 영역에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주한 미군 재조정이 미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바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당사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도 중국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듦으로써 미중 택일 구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라는 이분법적 지정학 게임에서 벗어나 미중의 공통 관심사인 보건, 기술 사안

10 전해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20.12.15); 전해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활동 동향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3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21.11.25).

11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2) (2021.6), pp. 119-150.

12 임태훈, 이은채,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영향: 양국 역내전략간 상호연계 및 보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4) (2022.6.), pp. 467-492.

13 김소연, 권재범, 박성윤, “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4) (2021.10.), pp. 35-66.

14 송지선,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4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2021.12.8).

15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22(3) (2019.10.31), pp. 243-270.

16 오승희·박창건,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63(3) (2020.9), pp. 29-54.

등을 망라하여 경쟁과 협력이 동반된 복합적인 관계 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영종은 최신 연구에서 국제제도는 패권국이 포용과 배제를 통해 도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한다.¹⁷ 군사경쟁과 달리 정당성 경쟁의 양식을 띠는 제도 경쟁은 미중 경쟁의 특징으로 진영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무계획성”은 한국과 같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가들에 기회의 창을 열어 주고 있다고 이해한다. 한국은 이 기회를 계기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여 IPEF가 반중 성격을 띠지 않도록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한 중국에 수세적 태도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한중관계도 중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세안과는 ‘가치의 공유’보다는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 박원곤의 2022년 연구를 꼽을 수 있다.¹⁸ 박원곤은 연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동맹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 상황을 최영종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강대국 중심의 지역 기반 질서

를 추종하고 있다면,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를 내세움으로써 미중이 인도·태평양에서 정당성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는 동맹과의 분업 혹은 줄 세우기를 통해 책임과 비용을 전가 혹은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안보 및 경제 협력체 구축을 시도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미국-동맹 통합, 전장의 통합(MDO), 가용한 군사자원의 통합, 미국 동맹국들 간의 통합, 지역통합사령부의 책임구역(AOR: Area of Responsibility)들을 연계한 통합 군사력 운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퀴살(hub-and-spoke)” 형태의 동맹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토의 공간적 범위와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전망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 미군 재배치 계획에 기반한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2021)」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과 전략자산이 중국 위협 증대 시 신속히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연구는 이 같은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현실과 미국의 지전략 변화를 인식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재촉한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결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구체성이 떨어졌고, 남북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에 관심을 둘 여력이 남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앞서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에서는 한미동맹을 활용한 역내 질서 및 구조 개편 참여를 조언한다. 이때 전장

17 최영종,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30(3) (2022.8), pp. 121-143.

18 박원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통합억제와 전 세계 대비태세,” 『한국국가전략』 제19호 (2022.7), pp. 29-58.

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동맹 논의는 지양하되, 먼저 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동맹 역할 분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위 세 연구는 공통적으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세적 입장에서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성을 띠고 현재 주어진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글로벌 지전략 구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취지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기존 연구는 미국이 통합억제 전략에 따라 동맹과 지역, 전장 등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지정학적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미국과 유럽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목적 및 배경에서도 밝혔듯이 미국과 유럽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상호 동조화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대서양 세력”이라는 지전략적 공통분모에 의해 발현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별도의 행위자인 동시에 “대서양 세력” 간 전략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이처럼 동서로부터 죄어오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관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해야 한다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식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망에 있어서도 미중 갈등의 심화 경향과 미국의 전략 추세상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전략적 동인 아래 대서양 세력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열점으로서 한반

도 및 인도·태평양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해로가 열리면서 지정학적 변방이었던 러시아와 북유럽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북극을 중심에 두고 지도를 보자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지정학적 연계성은 더욱 잘 드러나며 미국의 동맹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통합억제” 취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향후 극동 일본에 위치한 다국적군이 배치된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유엔사 후방기지는 인도·태평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표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직결될 것이다. 이 같은 지전략적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보 분야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 구조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역할과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앞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축의 이동은 주요국들의 지전략 경쟁과 국방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지정학적 변동에 따른 보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 현황 및 동인을 검토 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을 고민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022년 10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

국, 유럽연합(EU), 이탈리아, 스웨덴, NATO의 공식문서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각각 2장과 3장에서 검토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 한국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직면할 한계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미일 관계 및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며 연구를 맺는다.

II

미국의 대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위상 변화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
2. 동맹의 강조와 비용의 전가
3. 미일동맹의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합성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

클린턴 행정부 시기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논의는 워싱턴의 중요한 화두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관여(engagement) 전략을 추진하였다면,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국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였다.¹⁹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된 소모전과 2008년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 회귀’ 및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시기까지도 미국은 여전히 관여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다. 즉, 중국을 적극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면 결국 중국이 이 질서에 순응하는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이른바 키신저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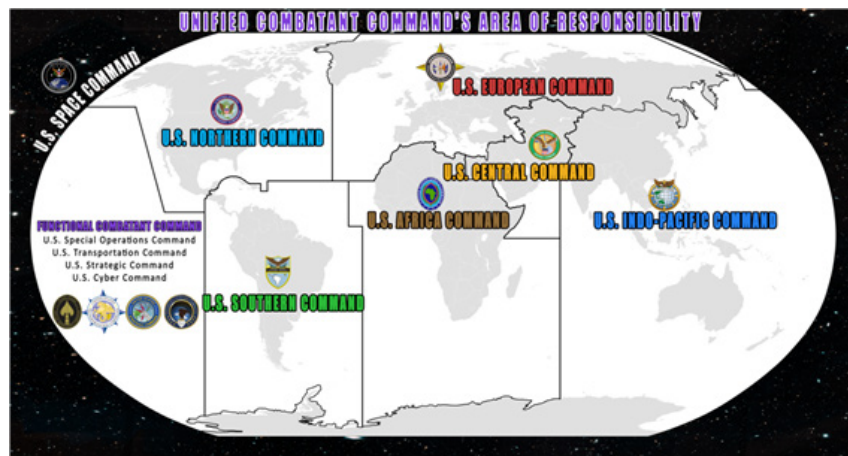
하지만 기대와 달리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다. 이후 양자 간 무역갈등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환율, 기술패권, 공급망 분리, 국제규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인도·태평양’ 개념이 처음 언급되기도 하였다.²⁰ 이후

¹⁹ 김태형 (2020), p. 92.

²⁰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Sharpening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Jan. 2018),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검색일: 2022.4.3).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태평양사령부(PACOM)를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로 개명하는가 하면, 2019년 6월 첫 「인도·태평양보고서(IPSР: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간하고 군사적 구현방안을 구체화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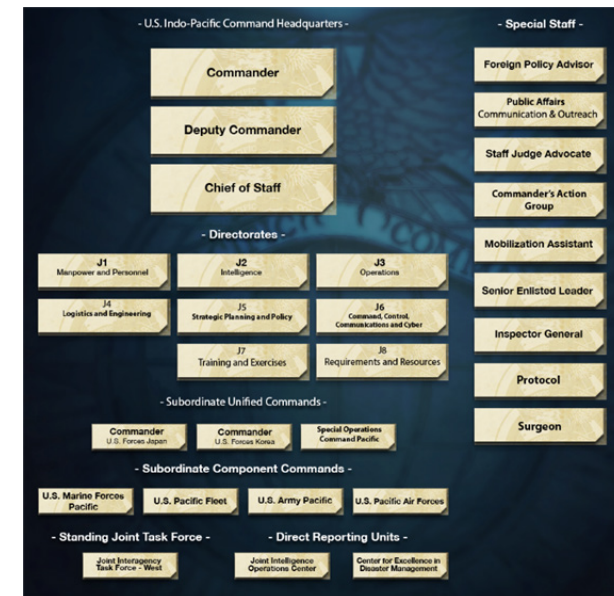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는 지역은 면적, 인구,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이 운용하는 전 세계 6개 지역 전투 사령부 중 최대이다.



[지도 1] 해외 주둔 미군 사령부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Unified_combatant_command)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위 통합사령부(Subordinate Unified Command)에는 주일미군, 주한미군, 태평양 특수작전사령부 등이 배속되어

있다.²² 즉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모두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모두 한미·미일 간 공유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지만 유사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휘체계 아래 움직이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한 미국의 전략과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1]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조직 (출처: 미국 인태사 홈페이지 <https://www.pacom.mil/Organization/Organization-Chart/>)

21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IPSР):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1 June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22.4.3).

22 US INDOPACACOM: <https://www.pacom.mil/Organization/Organization-Chart/> (검색일: 2022.5.1.).

미국 인도·태평양(IPSR 2019)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롭고(free) 열린(open)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축을 비전으로 아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자유(freedom)인데, 두려움이나 강압 없이 각국이 주권을 바탕으로 어느 국가와 협력하고 교역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열림(openness)은 지역 국가들의 운명과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해로 및 항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준비태세, 파트너십, 역내 네트워크 등 3가지 점이 강조되었다. 첫째 준비태세는 합동군의 치명성, 회복력, 민첩성, 준비성을 제고하고, 한국, 일본, 괌의 전략적 가치 및 주요 전력 발전을 강조한다.²³ 둘째 파트너십에서 역내 주요 우방국 관계 강화 및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역외 동맹국들의 참여를 독려한다.²⁴ 셋째 역내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역내외 우방국 간 상호운용성 및 공조관계 증진에 힘쓴다.²⁵

2. 동맹의 강조와 비용의 전가

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2022년 2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전략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로 요약될

수 있다. 통합억제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으나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점진적이고 동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 간(DIME) 협력 및 육해공군 등 각 군의 협력이 하나이고, 전 지구에 주둔한 미군 간의 협력(인태사, 중부사, 아프리카사, 유럽사 등) 및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둘이라면, 육해공, 사이버, 우주 멀티도메인(multiple domain)에서 동맹국과 “빈틈없는 통합(seamless integration)”이 셋이다.²⁶ 수단 면에서 통합억제를 수행하는 기제로 핵, 재래식무기, 우주 자원, 사이버 전력, 정보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수정주의 세력과의 군사 충돌과 하이브리드전에 적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1년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해안경비대사령관이 공동서명하고 발간된 “해양전략”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⁷ “해양 전략”은 미 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중점을 두고 세 가지 점에서 통합된 해양력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해군력 운용 면에서이다. 장기 전략적 경쟁 차원에서 평시 적극적 군사활동을 통해 회색지대 지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래전 수행을 위한 범세계 대비태세 구축을 추구하며, “평시경쟁-위기-전시”로 이어지는 경쟁의 모든 범주에서 군사력 운용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 해군력의 발전 방향이다. 전(全)영역 재난대응 및 국제무역과 인명 보호 등 다양한 평시 임무를 포

23 IPSR, 2019.

24 Ibid.

25 Ibid.

26 신각수, 최종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 (2022.9.22); US DoD, “Summary of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ND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 Jan. 2018).

27 Secretary of the Navy Kenneth J. Braithwaite,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All-Domain Naval Power,” (Dec. 2020). <https://media.defense.gov/2020/Dec/17/2002553481/-1/-1/0/TRISERVICESTRATEGY.PDF/TRISERVICESTRATEGY.PDF> (검색일: 2022.5.22).

괄하는 통합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평시)경쟁”의 모든 범주에 활용 가능한 개념 및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동시에 분산 가능한 다수전력 우선 확보(무인자율무기체계의 도입 등) 역시 강조된다.

결국 이 통합억제의 핵심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영역에 걸친 전력 투자를 통해 상대를 억제한다는 데 있다고 요약된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전진 배치한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동맹국의 전략자산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고, 동맹국 간 연동도 증대하여 사실상 “연맹(federation)” 형태의 억제 능력 강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²⁸ 지난 2022년 6월 15일 신미국안보센터를 개최한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같은 역내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⁹ 미국과 동맹국들 간 연대 강화는 명백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미국과 동맹국들 간 양자 결합보다는 집단방위체제를 통한 통합억제로 결집하는 것이 동맹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다자협력’이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안보 비용의 동맹 전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양자 동맹을

다수 맺는 방식(hub & spoke)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대서양 지역에서의 나토와 유사한 집단안보체제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⁰ 물론 유럽과 달리 역사 문제, 영토분쟁, 주권경쟁 등 다양한 난제들이 존재하는 아시아에서 하나의 통합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태평양 4개국을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질적인 동맹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특성상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이 어렵고, 미국의 역량도 이전 같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패권 유지를 위해 분산된 미국의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최근 쿼드(QUAD)와 오키스(AUKUS), 푸른 태평양 협력체(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³¹ 등과 같은 미국 주도의 소다자(안보)협력체 결성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 다자협력의 목적은

30 박원곤(2022.7.), p. 37.

31 PBP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주도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소다자 안보 협력체이다. White House Statement by Australi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A New Initiative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in Support of Pacific Island Priorities (27 June 2022); 설립 배경으로는 지난 2022년 3월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려를 표시하면서부터이다. 솔로몬제도는 2019년 36년 동안 이어 온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친중-친대만 세력 간 대립으로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었다. 이 같은 우려와 내홍에도 불구하고 4월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대응,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이를 위해 중국 군함이 기항 및 경찰과 군 병력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주변국과 미국, 일본 등이 솔로몬제도 및 인도·태평양 도서지역과 앞다투어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에 나서고 있다. 최현준, “중국, 솔로몬제도와 군사협력 추진...호주, 뉴질랜드 ‘화들짝’,” 『한겨레』(2022.3.2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6678.html (검색일: 2022.9.21.); 강수정,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의 지정학적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2.6.24),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618&mid=a&board_id=41&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9.21.).

28 박원곤, “인태지역 내 한국의 동맹전략,” 최종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2022.9.22.) 발표문, p. 8; 미국방부 부장관 히스(Kathleen Hicks)의 지역 안보를 위한 “federated approaches”를 옹기 것이다. 박원곤, “미국의 인도·태평양과 한미동맹: 통합억제와 전 세계 대비태세,” 『한국국가전략』 제19호(2022.7.), pp. 29-58, p. 24.

29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The 2022 CNAS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Security in the Balance (virtual conference) (14-16 June 2022) <https://www.cnas.org/2022-conference-registration> (검색일: 2022.10.27).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초세계화 시대에 미국은 중국과 협력, 경쟁, 갈등(3C: cooperate, compete, confront) 등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였지만, 이제 미중 전략경쟁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경제, 관세,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나³²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밝힌 것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잘 나타난다.³³ 특히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진영화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전면적 대립이 이루어졌던 냉전 시기 미소 대결과 달리 현재의 세력권 분리는 갈등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이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중심으로 세력권 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 분리를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금력과 제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감염병, 환경 등 초국경적 협력을 통해서만 대처가 가능한 신홍안보 영역의 이슈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갈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32 Donald J.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7).

33 Joseph R. Biden, “Renewing America’s Advantages: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 2021).

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방위적 전략경쟁 국면에서 앞서 소개한 통합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은 전 세계에 분산된 미군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2021)」에 따르면,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이용한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소수의 특수전 부대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GPR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전략투사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개념에서 인도·태평양은 하나의 “책임 구역(Area of Responsibility)”으로 제한되지 않는다.³⁵ 이는 기존 지역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역동적 전력 전개(DFE: Dynamic Force Employment)”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³⁶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처럼 전진 배치된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³⁷ 실제로 GPR에 따르면, 타지역의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역시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³⁸ 미국은 해외

34 이수훈,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최종현학술원 DeepDive 세미나(2022.9.22.) 발표문, p. 9.; 강석울, “미국의 대한민국 주요 정책과 한미동맹 핵심 현안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미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대외정책 및 한미관계 핵심 현안 및 전망 발표문, p. 27. file:///C:/Users/MissTea/Downloads/fileDownload2.pdf (검색일: 2022.9.21).

35 박원곤 (2022), p. 37.

36 Ibid.

37 Ibid.

38 Department of Defense, “2021 Global Force Posture Review (GPR),” (29 Nov 2021).

주둔 미군의 규모를 최소화·정예화하되, 획기적인 원거리 투사 능력을 확보하여 위기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 미군 역시 2022년 가을부터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기갑여단전투단(ABCT)을 스트라이커 여단(SBCT)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³⁹

동맹과의 협력 증가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가 미군과 재래식 무기의 절대적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대신 재래식 무기의 활용도를 제고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력 증강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도 보듯이 현실이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0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 필요성을 주장하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하였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억제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서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약 60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다.⁴⁰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명명된 유사한 계획에 대해 35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하였다.⁴¹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 역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중

국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 태도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바이든 정부가 연달아 발표한 주요한 전략 문건들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2022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토대로 「202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는 국방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통합억제, 전역화, 지속적 우위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2022 국방전략서」가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2022 미사일방어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와 통합된 방식으로 작성되어 같은 시기 함께 공표되었다. 「2022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역내를 넘어 국제체제 전반에서 경쟁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북한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데 이어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핵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고 맞춤형 확장억제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의 공세화 경향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39 GPR에 따르면 미국은 세 가지 형태의 해외주둔 미군을 운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필요 시 순환병력을 증가 2) 순환병력 파견을 일시 중지하는 형태 3) 상주병력의 순환 병력화; 박원근 (2022.9.22.), p. 14.

40 이조은,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팜 (2020.7.3),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congress-indopacific-deterrence/6032545.html (검색일: 2022.9.27).

41 Ibid. 미 의회는 2018년 말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 계획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은 “아시아 안심법”의 연장선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미일동맹의 강화와 인도·태평양의 정합성

가. 인도·태평양에서 미일 이익구조의 동조화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은 동맹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중에서도 미일 협력은 미국 인도·태평양의 핵심 톱니바퀴로 자리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도·태평양은 일본(아베 내각)이 제안하고 미국(트럼프 행정부)이 발전 활용 중인 종합세계경영 전략이다.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발전 과정을 보면 미일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성 및 정책적 정합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은 일본의 인도·태평양을 간과해서는 전략의 밑그림 전체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탈냉전기 일본은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서 경합을 벌였다. 미국 역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고이즈미 총리는 ASEAN+3(한중일)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06년 출범한 제 1차 아베 내각은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외교기조 아래 일본과 인도 관계를 강화하였다. 2007년 8월 인도 의회에서 가진 아베총리는 “두 바다 교류(CTS: Confluence of the Two Seas)” 연설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이 “자유롭고 번영된 바다로서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⁴²

42 권태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전략구상과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 전망,” 『전략논단』 제 27호 (2018 봄·여름호) pp. 133-167, p. 143.

아베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빛을 본 것은 2012년 아베 내각 2기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맞서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Democratic Security Diamond)”라는 개념 아래 오늘날 쿼드의 전신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 안보협력 구상을 제안하였다.⁴³ 2015년 12월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공표하였다.⁴⁴ 2016년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에서 두 개의 대륙(아시아와 아프리카)과 두 개의 대양(태평양과 인도양)의 연대에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이 달려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였다.⁴⁵

43 Ibid. p. 144.

44 김석수, “인도·태평양 시대와 일본과 인도 관계,” 『일본연구』 제81호 (2019. 9) pp. 7-30, p. 7.

45 이기태, “아베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22(3) (2019.10.31), pp. 243-270, p. 244; 김석수 (2019), p. 8.



[지도 2] 중국과 미·일의 지전략 구도(출처: 권태환(2018))

아베 총리의 인도·태평양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인도·태평양은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2017년 11월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을 거쳐 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지역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하였다.⁴⁶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 사령부(PACOM: US Pacific Command)”를 “인도양과 태평양의 긴밀해지는 연결성을 의식해”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로 개칭하였다.⁴⁷ 2021년 회

46 김석수 (2019), p. 14.

47 James Norman Mattis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 이길성, 전현석, “美 태평양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

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국 상하원(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가 요구한 대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상원의 법안에는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 미사일 공동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⁴⁸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2월 국가안보전략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표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은 범정파적 국가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 강조를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 구애로부터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에서 이익구조의 동조화는 탈냉전기 내내 지속되어 온 일본의 미일동맹의 미래에 관한 정책 구상에 따른 것이다.

나. 미일 인도·태평양 정책의 정합성

이처럼 일본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단계마다 체계적인 정합성(整合性)을 보이고 있다.⁴⁹ 첫째, 국가안보전략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자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양국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양국의 전략은 수렴하고 있다.⁵⁰ 일본은 2013

부로 이름 바꿨다” 『조선일보』 (2018.6.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0182.html (검색일: 2022.5.4.).

48 이조은,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팸 (2020.7.3).

49 권태환,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최중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 (2022.9.22.) 발표문, p. 5.

50 Ibid.

년 12월 아베 정권에서 최초로 작성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신흥국(중국, 인도 등)의 부상에 의한 세력균형의 변화와 북핵 등 상존하는 위협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의 틀이 부재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⁵¹

이 같은 문제의식은 둘째, 국가안보전략의 하부 단계인 「외교청서」와 「방위계획대강」 및 「방위백서」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국가방위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계획검토(QDR)」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상호 조율하고 있다.⁵² 2013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에 의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 간의 경제군사적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회색지대”가 중국에 의해 분쟁화될 경우에 대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⁵³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미일이 공동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12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힘에 의한 현상변경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2018년 3월 27일 도서 침공에 대비하여 수륙기동단(해병대)과 육상자위대 휘하 지상 총대사를 신설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전력증강은 2017년 방위백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추진 중인 「제3의 상쇄전략」 등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2019년 6월 1일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

양보고서」에서 2013년 일본의 「방위계획대강」과 마찬가지로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긴장도가 높은 “회색지대(gray zone)”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에 주목하고 동맹들과 함께 규칙기반 질서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⁵⁴



[표 2] 미일 국가안보체계의 정합성과 밀접성 (출처: 권태환, 2022.9.22)

셋째, 실천을 위해 보다 상세화되는 단계에서 미국의 「국가군사전략」과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통합방위전략」은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미일 가이드라인)」 아래 또다시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⁵⁵ 미일은 2022년 1월 7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양국의 안보정책상 우

51 권태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전략구상과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 전망” (2018 봄·여름호), p. 135.

52 Ibid., p. 136.

53 Ibid.

54 US DoD, 2019 IPSR.

55 Ibid.

선순위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군사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미일 2+2회의는 2021년 3월 바이든-스가 2+2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기시다 내각 출범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미일 동맹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상징적 행보로 분석될 수 있다. 주요 의제로 1) 미일 사이에 완전한 “정합성(整合性)”의 확보 2)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등 첨단 기술 협력 3)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양·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논의되었다. 이번 미일 2+2회의로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hub&spoke)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째,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대목은 역내 안보 문제 해결에 미일의 공동 관여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및 극초음속 무기 대처 능력 개발(전자포: Rail Gun)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시사한다. 셋째, 양국은 쿼드와 함께 확대된 일-호 방위협력 및 미국의 오키나와 출범에 대한 상호지지 표명,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유럽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공조 강화 환영을 통해 미국의 지역 전략에서 일본의 위상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행과 실천 단계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는 대신 이른바 ‘보통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역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익이다. 사실 이러한 미일 밀착이 완전

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냉전질서가 시작되는 시기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로 일본을 선택하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로 변신시켜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해 매우 온건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며,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일, 중일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에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일본은 전후(戰後)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국가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불완전주권 국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⁵⁶ 그런 일본이 탈냉전 시기 미중 갈등을 매개로 불완전주권 국가의 명예를 벗고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56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pp. 15-22.

III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 회귀와 군사적 관여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위상의 재정의
2. 가치에 편승한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
3. 기착지의 모색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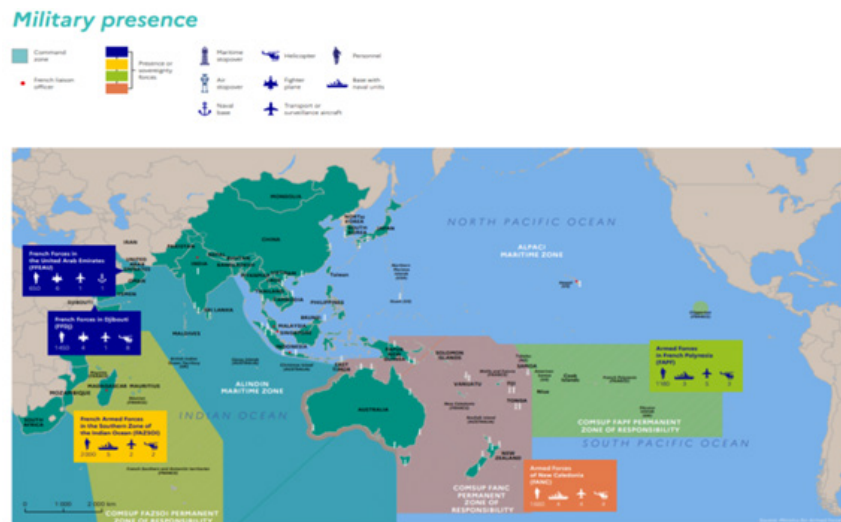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위상의 재정의

미중 패권 경쟁에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등 역외 국가들까지 가세함으로써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까지 인도·태평양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유럽 국가들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EU), 이탈리아, 스웨덴 7개국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군사적 동기를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들을 EU 인도·태평양으로 한데 모으게 한 동력은 하나이다. 바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으로부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중 갈등을 패권 경쟁이 아니라 “체제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2019.5)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 국가전략서를 발간하는 등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⁵⁷ 2022년 2월 개정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에 해외영토를 보유한 역내 국가로서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다수의 해외영토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정체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비군 7,000여 명이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57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The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3);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s Defence Strategy in the Indo-Pacific” (2019);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2019–2025 Military Programming Law” (2019);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for an inclusive Indo-Pacific””(2019);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s Indo-Pacific Strategy” (2022).

지역에서 프랑스의 군사적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역내 다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에서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도·태평양 수역이 프랑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약 70%를 차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면에서도 EU 역외 수출의 34%, 역외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도 3] 인도·태평양에서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범위와 '책임지역(Zone of Responsibility)' 구획 (출처: France's Indo-Pacific Strategy, 2022)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 두 번째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2020.9)하고 유럽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⁵⁸ 우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관계를 다변화("diversify")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이사회 의장국 역임 시, EU-ASEAN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승격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2020.12). 특이점은 독일이 그동안 전범국이라는 죄의식 아래 유럽에서 자제해 온 것과 달리 최근 인도·태평양에서는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규칙 기반 질서의 옹호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안보 아키텍처 설계에 적극적 관여를 통한 국익의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대의제를 설정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교류를 역내 국가들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가령 "아시아해적퇴치협정 (ReCAAP)" 가입(2021.8)으로 프리깃함 "바이에른"이 인도·태평양을 순찰하는 중요한 명분을 획득하였다. 독일은 일본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2021.4)을, 호주, 일본과 "3국 안보외교정책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독일 국방장관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방한(2021.5.26)하여 "한독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군사 부문에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별도로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표한 바는 없으나 "통합검토서"(2021.3)를 통해 대략적으로 밝힌 바 있다.⁵⁹ "통합검토서"는 브렉시

58 Die Bundesregierung, "Leitlinien zum Indo-Pazifik"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2 Sep. 2020).

59 UK Cabinet,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Mar 2021).

트 이후 처음 발간한 영국의 국가 전략서로, 여기서 인도·태평양은 유럽을 벗어난 “글로벌 브리튼”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의 인도·태평양의 특징은 정치적 수사보다 행동이 선행하였다는 점이다. 미국과 대테러 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첨단 무기 개발 및 군사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2010년대부터 신항모 건조 및 인도·태평양 항로상 항구의 현대화 등을 통해 이미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5 ~ 12월에는 퀸 엘리자베스 신항모를 중심으로 한 영국·미국·네덜란드 연합 항모전투단을 편성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을 방문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11월 프랑스,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인도·태평양을 발표하였으나, 유럽연합과 밀접히 연계하여 인도·태평양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⁶⁰ 네덜란드는 이번 미중 갈등을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네덜란드와 유럽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현안 해결에 있어 중국의 강압적인 방식과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에 대한 야욕을 문제 삼고 있다. 즉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총체적 도전(“in a hybrid manner”)이 인도·태평양의 역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¹ 둘째,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적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전략 백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지역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음으로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가 최근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⁶²

유럽연합(EU)은 역외교역의 70%와 해외직접투자의 60%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증대되는 군사·정치적 긴장감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교역과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⁶³ 네덜란드가 제안한 대로 유럽 차원에서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위한 구상을 7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2) 녹색전환 3) 해양 거버넌스 4)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5) 연계 6) 안보 및 방위 7) 인간안보.⁶⁴ 결국 EU의 적극적인 인도·태평양 수립의 배경에는 미중 경쟁 하 지나친 대중무역의존도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험을 헤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Diversify”)가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예: EU-ASEAN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이탈리아는 2022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강소국 네덜란드와 유

60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13 Nov. 2020).

61 Ibid., p.4.

62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행보는 2022 서울안보대화(2022.9.6 ~ 8)에서도 잘 나타났다. 27개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카이사 올롱그렌(Kajsa Ollongren) 국방장관이 축하하고, “인태지역 신뢰 재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을 주제로 이루어진 본회의 2에 국방부 국제국 국장 라스 발라브(Lars Walrave)가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특히 라스 발라브 국장은 EU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정합성에 대한 질문에 완벽히 일치한다고 대답하였다.

63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on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16 Sep. 2021).

64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16 Sep. 2021).

사하게 EU의 공동전략 지지를 통해 다자주의 편승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⁶⁵ 유럽집행위와 고위대표가 채택한 EU의 인도·태평양(2021.9.16)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탈리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들과 달리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잇는 “지중해 국가”로서 정체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탈리아-인도 양자 협력의 강화는 인도·태평양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이해된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인도에 2020년 한 해만 인도에 200만 유로를 직접 투자하고, 조선과 자동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청정에너지와 인프라, 농업 등에서 양자협력을 추구하고 있다.⁶⁶ 2019년 이래 IORA(Indian Ocean Rim Association) Dialogue Partner와 ASEAN Development Partner로 활동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적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을 강조해 왔다면 북유럽 국가들은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변동 요소까지도 고려한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DII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는 2020년부터 “Denmark needs an Indo-Pacific Strategy” 시리즈를 게재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덴마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침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는 최초로 스웨덴

65 (Ita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talian Contribution to the EU Strategy for the Indo-Pacific”(20 Jan. 2022).

66 Harsh V. Pant, “Why Italy should Reorient towards the Indo-Pacific and India?” ORF Commentaries (18 Dec 2020).

외교부가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서를 발간하였다.⁶⁷ 이번에 발간된 스웨덴의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에 대한 중장기 전략서의 특징은 영국, 독일, 프랑스와 달리 인태지역의 해외개발협력(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단순히 환경안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전략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북유럽으로서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두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된다. 현재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전략상 그린란드를 선점하거나 중립 지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표면상으로 중립국을 자처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 불안정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북극해에서 항해가 원활해지고 러시아의 해상 진출이 용이해진다. 이는 지난 300여년간 이어 온 구미의 전통적 대러 봉쇄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한 것처럼 북극해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러시아가 북극해로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미리 간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북유럽의 안보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해군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예상된 수순으로 보인다.

67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trategy for Swede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2022–2026” (17 May 2022).

그러나 북극의 해빙이 반드시 북유럽에 불이익과 불안을 조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기후적으로 불모지, 지리적으로 변방으로 분류되었던 북유럽은 기후변화를 맞아 기회의 땅이자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와 북유럽의 북극 해안선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것과 동시에 북유럽 국가들이 북반구 어느 곳이든 해상 진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 북극을 통해 인도·태평양으로 항해하는 경우 서유럽 국가들이 지중해와 걸프만을 거쳐 오는 항해보다 약 10일을 단축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NATO는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글로벌 안보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NATO의 관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NATO가 2019년 12월 런던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최초로 중국의 부상을 “기회와 도전”으로 규정한 이래 NATO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의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020년 12월 NATO는 북대서양이사회 외교장관회의에서 최초로 글로벌 세력균형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을 회의 의제로 다루었다. 또한 이 회의에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 및 유럽공동체인 EU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외교장관을 최초로 초청하였다. 2021년 6월에 열린 브뤼셀 NATO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22년 6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는 P4(뉴질랜드, 일본, 한국, 호주) 국가들이 초대되는 등 NATO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책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문서가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ATO의 「2022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이다. 기존의

NATO 전략개념에서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경계로 한 범대서양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0 전략개념」을 대체하는 「2022 전략개념」에서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NATO의 입장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NATO의 어젠다는 전통적 지리적 범위를 넘어 크게 확대되었다.⁶⁸ 이번 전략개념에서 NATO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회원국들이 마주한 주요 도전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이 시리아, 이란, 북한 등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NATO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므로 NATO는 중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관여를 수행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대중전략 이외에도 이번 NATO 신전략개념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및 인도·태평양이 처음으로 별도로 언급된 만큼 이 같은 내용은 NATO의 역외 미션 확대 논의와 맞물려 더욱 큰 진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⁶⁹ 즉, 지리적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의미한 해양과 사이버 전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NATO 조약 5조와 6조에서 규정한 NATO의 전통적 활동 범위 역시 NATO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NATO의 대중전제 기조는 중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경각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앞서 소개한 유럽연합 및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인도·태평양을 NATO가 이번 전략개념에서 상당 부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관여가 임박한 것이라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NATO가 처한 ‘상황’(러시아-우크라이나

68 NATO, “2022 Strategic Concept” (29 June 2022) #13, #14, #18, #43, #45.

69 Ibid., #7, #8, #13, #15, #20, #24, #25, #27, #43.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위기들)과 ‘능력’, 그리고 ‘명분’ 차원에서 볼 때 NATO가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를 수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대신 이번 전략개념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격상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치에 편승한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⁷⁰

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자국의 전략 공간이 축소될까 인도·태평양의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역내 국가도 아닌 대서양 세력인 서유럽 국가들까지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관여를 확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에서 대중견제로 시작한 엄혹한 현실주의 안보 경쟁이 횡행하는 가운데, 유럽은 가치에 편승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을 경제, 안보적으로 미래 핵심 이익 공간으로 상정하고 21세기의 ‘엘도라도’, 즉 기회의 땅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낮은 디지털 문맹률, 풍부한 고숙련의 젊은 노동력, 아세안 신흥국들의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만, 한국 등 인도·태평양 중진국들은 유럽과 북미 경제가 코로나19로 성장을 멈춘 사이에도 제조업 주도의 빠른 경제회복

력을 보여 주며 세계 경제를 지탱한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제도가 잘 구축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시 기대수익으로 미국은 2035년까지 최소 GDP의 0.4 ~ 0.5% 증가가 기대되고⁷¹ 영국은 2030년까지 교역의 65%가 증가되어 3,700만 파운드 규모를 더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⁷² 영미와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EU는 중장기적으로 GDP의 0.3%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⁷³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유럽의 정치적 노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테러리즘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전략무기의 최첨단화 등으로 인한 안보 환경의 변화, 셰일가스 개발과 탈탄소 정책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과 재난재해, 난민, 인구절벽과 같은 위협의 복합화 등이 영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유럽 너머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부터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정착시키고 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남중국해에서 군

70 본 절은 한국해양안보전략연구소(KIMS)에 기고한 다음의 줄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조은정,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I): 지정학적 분석,” KIMS Periscope 285호 (2022.8.2); 조은정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II): 위기인가 기회인가,” KIMS Periscope 286호 (2022.8.9).

71 Chunding Li, Xin Lin and John Whalley, “Comparing Alternative China and US Arrangements with CPTPP,”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orking Paper, no. 26877 (Mar. 2020).

72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UK Accession to CPTPP: The UK’s Strategic Approach” (Apr. 2021).

73 Patrick Allard and Frédéric Grare, “European Trade and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hy the EU should join the CPTPP,”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mentary (1 Dec. 2021).

사적 관여를 확대해 왔다. 유럽의 군사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대중견제 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자국의 위상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영국은 인도·태평양을 대내적으로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스스로의 인식과 대외적으로 ‘중견국’으로 취급되는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독립적 목소리(independent voice)”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다.⁷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시대 유럽인들이 마주하는 ‘구조적 한계’는 분명하다. 유럽 지정학 전문가 데이비드 크리크만스(David Criegemans)는 네덜란드 국제정치 싱크탱크 클링덴달(Clingendael) 기고문(2021.9.1)에서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추세로 미루어 유럽이 인구통계학적으로 향후 유라시아 대륙의 반도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⁷⁵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의 고위 대표이자 부집행위원장은 2021년 9월 16일 EU의 인도·태평양 발표에 앞서 “세계의 중심은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전략 수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⁷⁶ 이는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처한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실존적 불안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세계전략은 체제 경쟁자로서 중국을 군사적 방법을 포함한 길들이기로 그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 보유한 연성(첨단무기기술 개발 및 동맹강화 등) 및 경성(전략무기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 자산들을 인도·태평양으로 결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대서양에 안보 공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디커플링 가능성은 대중 정책과 그린·디지털 정책, 그리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회피하는 데에서도 관찰된다. 레토릭상으로는 중국을 유럽도 미국이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현황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유럽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2차 대전 이래 미국 국제정치의 주 무대는 유럽과 중동이었고, 그 군사적 활동의 근간은 NATO 동맹이었으며, 그 대서양 동맹의 중심에는 누가 뭐래도 영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도·태평양으로 미국이 주 무대를 이동하면서 대서양 세력인 영국과 NATO의 전략적 가치가 의심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NATO 유럽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귀환’과 ‘동맹의 강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탈레반 정권과 공조 여부, 인도적 지원 여부,⁷⁷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 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영국,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국군사동맹체 오키우스(AUKUS)가 기존의 핵비확산주의 기조를 깨고 원자력추진참수함 공유를 공표함으로써 유럽인들의 “방기”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었으며, 또한 그 우려는 올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사실로 굳어졌다.

74 (UK) Prime Minister's Office, "PM Boris Johnson's Speech in Greenwich," (London, 2020).

75 David Criegemans, "A new regional 'great game' in and around Afghanistan?" <https://spectator.clingendael.org/nl/publicatie/new-regional-great-game-and-around-afghanistan> (검색일: 2021.9.11.).

76 European Commission, "State of the Union 2021" (Brussels, 2021).

77 아프가니스탄이 내륙국가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최근의 동맹간 균열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해양전략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은 2차 대전 후 ‘대서양 세력’으로 공산주의와 테러에 맞서 오랫동안 이익구조를 동조화해왔으나, 이제 미국과 유럽은 자신을 앞다투어 ‘태평양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협력보다는 경쟁 혹은 갈등 구도에 진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소위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미국-유럽 동맹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불량 국가들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유럽에 이란과 러시아는 분명히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국가들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유럽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교역 관계 면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유럽은 남중국해 등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면서도 별도로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⁷⁸ 즉, 유럽국가들은 인도·태평양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럽의 지정학적 의미가 축소되어 세계 무대에서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국가들이 한국, 대만, 일본 등과 독자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78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China,' (2021.7.26.)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china/> (검색일: 2022.9.19.).

3. 기착지의 모색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

미국과 달리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NATO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현재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은 총 9개국인데 그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과의 동맹국이며 NATO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었다.⁷⁹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framework document)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이 2년마다 갱신된다.⁸⁰ 개별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NATO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약 1,400종류 활동을 망라한 목록(소위 'Partnership Cooperation Menu')에서 NATO와 파트너 국가간 합의를 통해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구성된다.⁸¹ 앞서 언급했듯이 NATO의 「2022 전략개념」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NATO에 인도·태평양에서 후방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NATO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 다자 안보협력보다는 NATO를 중심으로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관계를 갖는 ‘바퀴살(hub and spoke)’

79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을 중심으로 한 NATO 군사 임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여 글로벌 파트너에 추가되었다.

80 전혜원, "NATO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NATO 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37 (2014.10.24.), p.6.

81 전혜원, "한·NATO 협력 확대 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6-11 (2017.2.7.), p. 8.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⁸² NATO는 글로벌 파트너십 외에 다른 협력제에 속한 국가들에게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IPCP)”을 제공함으로써 非NATO 회원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통일성”보다는 “실용성과 유연성”을 추구하고 ‘파트너 국가’에 맞춤형 협력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⁸³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NATO의 대표적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자 NATO 주요국들의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본은 NATO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NATO와의 협력관계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의도가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파트너 국가를 꼽으라면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NATO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NATO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⁸⁴ 일본은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NATO의 협력국이자 최초의 NATO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다.⁸⁵ 일본은 1990년대 교육과 의료 지원 등 발칸 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NATO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⁸⁶ 동시에 1990년대부터 NATO와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고 NATO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사를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82 Ibid., p. 5.

83 Ibid., p. 8.

84 전혜원 (2014), p. 7.

85 전혜원 (2017), p. 10.

86 전혜원 (2014), p. 7.

2014년 5월 일본-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 체결된 이래 일본은 NATO와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NATO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군축·비확산, 안보 관련 과학기술에서 일본-NATO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위기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해적 퇴치를 포함한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강조되는 점은 한국과 다른 점이다.⁸⁷ 그 결과 일본과 NATO는 2014년 9월 말 아덴만(Gulf of Aden)에서 최초의 일본-NATO 해적퇴치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측은 역외 군사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NATO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공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양측이 군사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⁸⁸

실제로 일본은 NATO와 해양에서의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합동훈련에 관심이 많아 일본 해상 자위대는 스페인 및 발틱해에서 NATO군과 공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은 NATO 해양 지휘소에 연락 장교를 지정하고 브뤼셀에 호주와 마찬가지로 NATO 담당 대사관을 별도로 둘 정도로 NATO와의 외교적 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20년 6월 NATO-일본 IPCP는 NATO의 참여가 적절하다면 일본의 인도·태평양에서 훈련에 전력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여 NATO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여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글로벌 파트너 국가 중에서 NATO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군사협력이 제도화된 호주-NATO IPCP에는 이 같은 인도·태평

87 Ibid., p. 8.

88 Ibid.

양에서 협력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NATO 관계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서유럽 개별 국가들과도 전방위적으로 외교관계를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중요한 구심점(hub)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중이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영국과는 “5개국방위협정”에, 그리고 프랑스와는 “예외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에 다각도로 참여 중이다. 2012년 2차 아베 내각은 2007년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두 바다 교류 구상”을 발전시킨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항공모함이 기항하고 정비받을 대규모 군항을 보유한 일본을 극동지역에서 핵심 기착지로 선호하고 있다. 2021년 5월 규슈 합동훈련에서 보듯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진출 시 주일 미군의 주둔 근거이자 호주 공군 대령이 2010년부터 유엔사 사령관직을 수행 중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⁸⁹ 따라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미국 중심 안보동맹체제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 구조로 전략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⁹⁰

또한, 쿼드 및 서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임으로 일본은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반도 시각에서 이

같은 일본-NATO의 해양에서 군사협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평화유지활동 및 재난구호와 인도적 지원 등의 비군사적 목적을 들어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군사국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한국의 지분은 역내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등 역외 국가들에 의해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89 조은정,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122호 (2021.6.).

90 Ibid.

IV

인도·태평양 시대 한국의
지전략 수립을 위한 쟁점

1.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지전략 수립의 필요성
2.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문제
3. 인도·태평양 시대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변화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자,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단층선 지역이다. 한반도에는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립 구조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간은 물론 지역적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일본은 보통국가로 향하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한미·미일 동맹 등 동아시아 주요 동맹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는 세계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지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1.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지전략 수립의 필요성

탈냉전 이후 한국은 나름의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변화에 대응하여 왔다. 예컨대 탈냉전 초기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Nordpolitik)”을 표방하고 한소·한중 수교를 관철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 북방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효시가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와도 맥이 닿아 있다.⁹¹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존 북방정책을 계승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병행하였다.

91 장덕준, “북방정책 재고(再考):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재검토 및 새로운 대륙지향 정책을 위한 원형 모색,” 『슬라브학보』 32(1) (2017.3), pp. 277-278.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의 지전략은 냉전 시대 단절되었던 대륙과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한 모두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서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통일과 대륙진출의 연계는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다. 둘째,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와 등치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한반도 내외부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사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표적 사안이자, 한반도와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까지 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핵 문제는 한국의 지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주요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 셋째, 대륙 연계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철도 등을 통한 대륙과의 육상연계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는 물론이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이른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탈냉전 이래 한국의 꿈이었다. 문제는 대륙과 육상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때 한국과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⁹²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선시 되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정

부에서는 신북방정책 이외에 북한 문제와 직접 연계가 없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종합전략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배치·연계하는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은 각 시기별 정치적·정책적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한 주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고려,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이 원하는 것과 주변국이 원하는 것이 동일하거나, 최소한의 공통 관심사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거대 공간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종합 지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한국은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된 국가이자, 2차 대전 종결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성립으로 역사·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동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외전략 수립에 있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진보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남북 간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한국의 대외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보수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문제 해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자의 경우 남북관계라는 프리

92 조응래, “동북아 고속철도망 구상과 한중 해저터널,” 『교통기술과 정책』 6(3) (2009. 3), pp. 167-178.

즘을 통해 국제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한국 대외전략의 폭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 후자는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일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서 양자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외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양자택일적 선택으로 보는 경직된 사고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 대외 지전략적 구상의 한계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후 수립되는 한국의 지전략은 변화한 우리의 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초기인 1990년대 최초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의 한국과 2022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탈냉전 초기에는 변화한 국제질서를 반영하여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기초로 대륙 연계를 시도하는 정도가 한국의 대외 비전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외 비전이 단순히 대륙과의 연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무역,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질서의 일방적 수용 태도를 벗어날 필요도 있다. 국제기구 개혁은 물론이고 특정 이슈에 있어 국제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대외 지전략의 범위는 응당 전 세계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닌 한국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과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지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분리가 가속화하면서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후(前後) 질서의 핵심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무역과 안보적 측면에서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엔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으며, 강대국들 간 세력권 분리로 경제, 기술, 가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안보와 결합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약화되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외전략의 원칙과 가치를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초월적 대외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초월적 전략은 미중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한국 외교의 전략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³ 최근의 강대국 중심 세력권 분리는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냉전 시대와 같이 선형적으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 시기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제어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은 TPP를 탈퇴하였고, 일본을 중심으로 TPP에 잔류한 국가들이 새롭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였다. 공교롭게도 2021년 9월 미국이 AUKUS

93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서울: 청림출판, 2021), pp. 294-301.

결성을 발표한 다음 날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하였다. 중국은 이미 CPTPP 가입국 가운데 호주, 페루, 뉴질랜드, 칠레와 양자 FTA를 맺고 있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CPTPP 가입국 가운데 중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 불과했는데,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도 FTA가 적용되었다.⁹⁴ 즉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전선에 가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중국과 사실상 FTA를 맺으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다. 한국 대외전략이 진영 외교에 치우치기보다는 스스로의 원칙과 비전에 기반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문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 간 협력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한일 간 역사·영토 문제는 양국의 국내정치와 연계되면서 지속적으로 장애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 한미일은 이른바 반공연대로 묶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총리 사이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한일관계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대외정책은 구사하였고, 이는 한국의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과 과거사 문제가 지속·반복되면서 한일관계는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자 간의 제도적 안보협력이 본격화된 계기는 북한 핵 문제였다. 1999년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대북정책조정관은 대북 정책 재검토를 통해 6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한 협의 및 공동대응이었다. 이에 미국은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설치하였고, TCOG는 1994년 한미일 삼자 국장급 실무협의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추진되면서 TCOG는 종료되고 말았다.⁹⁵

그런데, 2010년 이후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견제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해가 일치하였으며, 이는 2012년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을 통해 양국은 미일동맹의 수준을 높이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반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한국의 입장은 미일과 다소 달

94 최진백,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21-52 (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21.12.30), p. 7.

95 조은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 『국제지역연구』 30(2) (2021 여름), pp. 80-81.

랐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협조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⁹⁶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양자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군사정보 공유라는 안보적 사안이 내부 정치와 연계되어 더욱 복잡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7년 한국은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미일 GSOMIA는 2007년 체결되었다. 하지만 한일 GSOMIA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탈냉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기까지 한미, 미일 협력을 통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GSOMIA 체결에 의견을 모았고, 2012년 6월 GSOMIA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2012년 한일 GSOMIA 무산은 국회 내 협의 등 국내 공론화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그 배경에는 한일 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 기인한 반일 및 혐한과 같은 국민 정서가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2014년 한국 및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삼자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하여 한미 및 미일 GSOMIA를 근거로 삼자를 연결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일협력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동년 11월 한일 GSOMIA가 체결되었

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로 국내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일 문제에 대한 국내 정치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변수가 작용하였다. 그런데 2018년 한국 사법부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확정 판결하면서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면서 최고로 치달았다. 급기야 2019년 8월 한국은 한일 GSOMIA 연장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과 미국 대외정책결정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유감과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미국 측이 한일 양자관계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결국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한일 GSOMIA 종료 결정 유예를 선언하면서 한일 GSOMIA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GSOMIA 논란은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한일관계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 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⁹⁷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 간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 양국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여 한일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한미일 균형 외교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한미, 미일 정상회담 성명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에 있어 한미일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에서 항행과 비행,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

96 Ibid., p. 84.

97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2 (2021), p. 6.

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대만해협에서 안정을 증시함으로써 세계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동중국해 방어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으로 관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반면 한미 간 논의는 전작권 전환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동맹의 역할 확대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에 대한 논의나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한미관계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⁹⁸ 이는 한미관계에서 두 가지 점을 시사하였다. 첫째, 한일 문제와 별도로 미국은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과 같은 인도·태평양 안보 이슈를 한미일 3국의 공통 의제로 상정하고, 한국에 한일 협력을 통한 역내 안정화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방향). 둘째, 미국은 한국처럼 미중 사이에 낀 동맹국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맹국들에 다양한 역할을 상정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필요 시 미국의 편에 서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점이다(속도).

문제는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삼각공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의 경색은 한미일 삼각협력의 톱니바퀴가 작동하지 않아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미동맹은 매우 긴요하지만, 일본과의 안보교류나 대중 견제 부문에 있어서 전면적 협력이 쉽지 않은 부문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 후방기지로서의 역할보다 서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일본 역할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면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호주 간 삼각협력이나, 미·일·인도·호주 간 쿼드 등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⁹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한반도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 대전략 속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대외적 입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우려되는 한반도 지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 및 견제를 위한 자구책을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자구책으로는 소다자 구성을 들 수 있다. 인도·태평양 역내국들뿐만 아니라 역외(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유사 입장 국가들과 소다자 안보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의 자체적 글로벌 안보망 구축 노력이 긴요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서양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원인은 국가들마다 다르며,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미중, 한일, 한미일 관계라는 전통적 동북아 지형을 벗어나 새로운 전략구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98 청와대, 2021년 한미정상회담 성명문 (2021.5.21).

99 조은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 p. 85.

또 다른 시도로는 범진영 국제협조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이념을 거슬러 동서 화합의 장을 제공했던 헬싱키 협정(1975)을 모델로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중일러북 등 주변국들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해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진영적 국제협조체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강대국 간 세력권 분리는 그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지정학적 단층선에 놓인 한국과 같은 국가는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진영을 포괄하는 국제협력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3. 인도·태평양 시대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변화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하면서 미국 대외전략의 초점은 대중전제에 맞추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통과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 증강을 주장하였는데, 이때 미국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중국이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미국은 현존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하였다.¹⁰⁰

미중 전략경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이해가 걸려 있는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이다. 6·25전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

기 위해 탄생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의 속성을 가진다.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에는 대북 위협 억지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대외전략이 변화하면서 대중전제를 위한 전초기지로서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억제 및 한반도 상황관리, 정전체제 유지 및 관리 임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역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로서 미국 세계전략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의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북한의 침공을 평화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하였다.¹⁰¹ 이후 유엔은 UNSCR 제84호(S/1588)를 통해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창설을 공표하였다. 이 통합사령부는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UNC: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¹⁰² 이처럼 유엔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 즉 한미동맹보다 먼저 한국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6·25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 대처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북한위협 대처 역할은

101 안보리 결의안(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제82호(S/1501)는 북한의 침공을 평화 파괴행위로 규정하였고, UNSCR 제83호(S/1511)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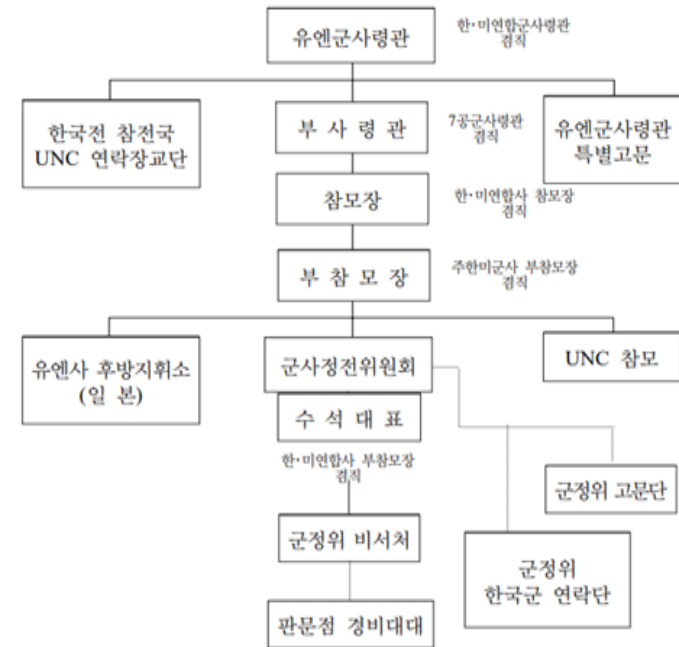
10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236-237.

10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p. 8.

한미연합사에 위임하고 정전협정의 이행 관리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한미연합사가 한미동맹의 핵심 기제로서 북한 위협 대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 사이에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은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유엔군 기지를 유지·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6·25전쟁 중인 1951년 9월 “에치슨-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 내 유엔군 활동에 대한 시설 및 역무 제공에 합의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에는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던 16개국은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유엔 원칙에 위반하는 공격행위 재개 시 또 다시 단결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⁰³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 2월 19일에는 유엔과 일본 사이에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일본 내 유엔군 기지를 유엔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한미연합사 창설 등과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파견되는 유엔 회원국 군대의 통제와 지원을 여전히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현재 유엔사 구조를 보면 정전체제의 관리 이외에 유엔 후방사를 통해 주일 유엔사 기지를 활용하고, 한반도 유사시 파견되는 부대에 대한 통제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유엔사 조직 (출처: 송재익,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의 재고찰,” 『주간국방논단』 제1008호 (2004.8.16), p. 5.)

이러한 유엔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조직은 위 그림과 같다. 이 가운데 유엔 후방사의 역할은 유엔사 후방기지의 활용 및 유사시 전개되는 부대에 대한 통제 및 지원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비병력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군대가 별도의 유엔 결의 등 절차 없이 개입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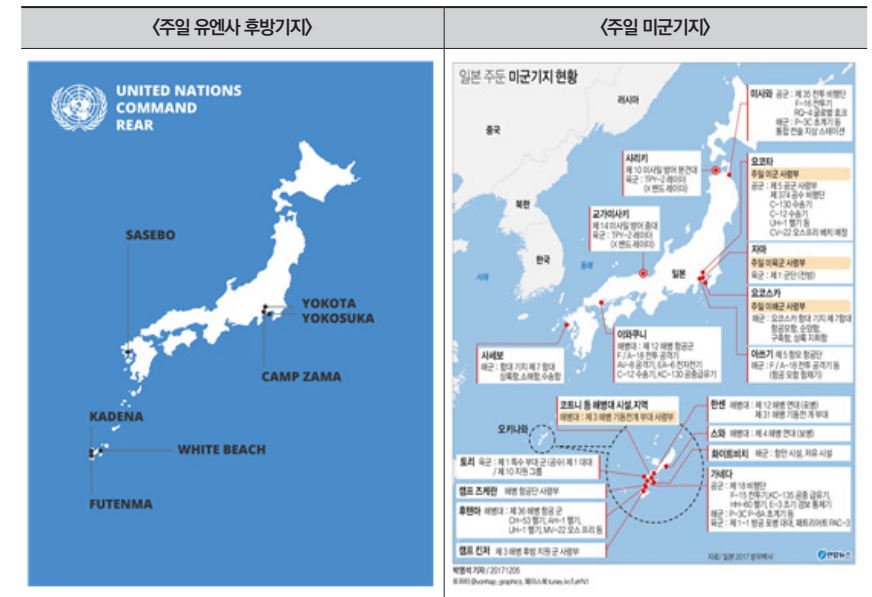
103 이명철 외, 『안보상황 변화가 유엔사 역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9), pp. 36-39.

104 장광현,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 (서울: 굿프렌즈정우, 2020), pp. 170-171.

문제는 2005년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유엔사 역할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4년 7월 당시 유엔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parrotti)는 한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에게 서신을 보내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정식 제안한 바 있다.¹⁰⁵ 유엔사는 재활성화를 위하여 평시 유엔사의 기능은 물론이고, 전시 효율적 전력 제공을 위해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국적·다기능 참모부로의 조직 변화를 추진했다. 2018년 7월 유엔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캐나다 군(軍)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되는 등 다수 국가 장교들이 유엔사 참모부 및 군정위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엔사에 참모요원을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이 겸직하는 것 이외에 유엔사 지휘부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¹⁰⁶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는 본토 4곳, 오키나와 3곳 등 총 7곳이 있으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심 주일 미군기지와 겹치는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미국과 유엔사 회원국 군대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지원·보급 및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 기지들은 주일 미군의 핵심기지들로서 평상시에는 항행의 자유 작전 등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하는 대중국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 기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

화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가 대중국 작전에 활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도 4] 출처: 좌) 유엔군 사령부 <<https://www.uncm/organization/UNC-Rear/>> (검색일: 2022.8.4)
우) 박영석, “일본 주둔 미군기지 현황,” 『연합뉴스』 (2017.12.5)

지난 10여 년간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점진적인 전진·증강 배치 및 빈번한 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이 차지하는 위상 변화를 잘 말해 준다. 미국은 11개의 항모전단을 운용 중이며 현재 9만 톤이 넘는 니미즈급 핵 항공모함은 10척을 보유 중인데, 그중 5개 항모전단이 현재 인도·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본토 기준) 동태평양을 담당하는 3함대 소속 4개 항모전단과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7함대 소속 1개

105 Ibid., pp. 194-195.

106 Ibid., pp. 198-204.

항모전단을 기본으로 유연하게 운용중이다.¹⁰⁷ 이는 미국 해상 핵전력의 50%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미국의 세계전략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 해군은 2017(2015)년 대서양함대 소속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약 12만 톤급으로 90대의 항공기 탑재 가능)를 태평양함대 소속 3함대에 배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CVN-73, 니미츠급)를 대신하여 2003년에 취역한 역시 니미츠급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6척의 항모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시 배치하는 등 전력을 역내에 집중시키고 있다.¹⁰⁸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최첨단 무인자율기술과 핵-전기 방식의 추진 방식을 도입한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2017년부터 운용 중이며 2024년부터는 기존의 핵 항모와 세대교체를 준비 중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운용 중인 항모들 또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⁹ 이 같은 미국의 전력 재배치가 중국이 주변국들과 벌이는 군사적 긴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워싱턴 정계와 군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¹¹⁰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항행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는 유

럽 국가들은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어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해상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¹¹¹ NATO의 핵심 세력인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대서양 세력은 중국이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열려 중국이 대서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대서양 세력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¹¹² 최근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전략적 변동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극해와 대서양이 연결되고 이에 대한 중국 해군의 진출이 예상되므로 대서양 세력의 선제적 대응이 인도·태평양 진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극해로 연결되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대서양 세력이 세계·지역 패권국들과 연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중 해상 견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 역외 함대들은 유엔사 후방 기지를 겸하고 있는 7개 주일미군기지를 인도·태평양 내 보급 및 기착지로 이미 이용 중이다. 한국에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제기 이후 미국이 유엔사 및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9·11 이

107 인터뷰에 응해주신 해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8 이우탁, 김선한, “美, 태평양에 해군군력 증강배치,” 『연합뉴스』(2014.1.16.). <https://www.yna.co.kr/view/AKR20140116078800009> (검색일: 2022.8.16.).

109 정시내, “‘19조’ 미국 최첨단 항모 제럴드 R. 포드호 첫 전개,” 『중앙일보』 (2022.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012#home> (검색일: 2022.10.27.).

110 Ronald R'Oourke, “Naval Ford(CVN-78) Class Aircraft Carrier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pdated on 25 July 2022), <https://sgp.fas.org/crs/weapons/RS20643.pdf> (검색일: 2022.8.9.).

111 관련 연구로 다음을 참조. 조은정,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2021.6.21); 조은정, 『영국의 인도·태평양: 역사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 서울: INSS 연구보고서 (2022.2.).

112 PT's IAS Academy, Comparing QUAD and AUKUS-Geopolitic's new wordgames, <https://civils.pteducation.com/2021/09/Comparing-QUAD-and-AUKUS-Geopolitics-new-wordgames-Prelims-UPSCMainsGSIII-Essaypaper-TreatiesandAlliances-DefenceandMilitary-WorldPolitics-IndianPolitics-Foreign-Affairs-China-September2021.html> (검색일: 2022.8.16.).

후 부시 행정부하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인도·태평양/동아시아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의 재편 및 축소, 전시 작전권 전환, 유엔사 재편 등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엔사 및 후방기지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유엔사 후방기지의 성격 변화는 한미 간 상호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국익 사안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즉 유엔사 후방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경우 한국이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한 가지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헌신적인 일본에 대비되어 한국이 “방기”될 위험이 다른 한 가지이다. 이 같은 이중 위협요인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 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제언

오늘날 한미동맹은 냉전기 대북 견제를 위한 반공 군사동맹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가치동맹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같은 이익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 및 동맹국들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율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가령 미국의 확장 역지에 대한 담보로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요구(반도체 공급망, 바이오 산업 투자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오늘날 그리고 향후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해 보인다. 이 같은 한미관계의 비대칭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만 가지 않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이 새로운 지전략을 구상한다면 최근 “미중갈등”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음과 같은 역학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위자의 변화이다. 미중경쟁 시대 한반도의 선택지는 냉전 시대처럼 미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처럼 양갈래가 아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 가령, 냉전 시대 미소가 양분하던 세계와 달리 오늘날 인도·태평양의 역학구도는 19세기 제국이었던 대서양 세력이 회귀하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핵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다면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100여 년 전에는 만국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제 역내 국가들까지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는 구조적으로 이분법의 시대였던 “냉전”과는 궤를 달리한다. 역외세력(대서양)뿐만 아니라 조연급 행위자(호주 등)들이 주연급으로 등장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위상 역시 세계 10대 교역국 중 하나로 상승하였다. 둘째, 게임 방식의 변화이다. 다양한 플레이어가 다양

한 톨로 인도·태평양에 관여함에 따라 게임의 방식은 복잡화되었다. 강대국들의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보듯이 군사력과 같은 강압적 수단만 동원되지 않는다.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분리에서 이슈에 따른 세력권 분리로 갈등과 경쟁, 협력이 공존하는 회색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일동맹과 달리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국 견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 및 해외주둔군 재배치 여부에 따라 향후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국방전략(2018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동북아에 집중된 해외주둔군을 중국 견제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배치할 것을 언급하였다.¹¹³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1년 2월 4일 국무부 연설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¹¹⁴

2022년 말 발표를 목표로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돌입하였다는 사실은 드디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한국의 독자적인 미래 국가전략 수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미-한일 관계의 부조화로 인한 한미일 공조체제의 불완전성은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만들고 이는 유엔사/유엔사 후방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군사동맹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시대적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과 유사입장국가들(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통한 한일 관계 위험을 헤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반중(反中) 연대’와 ‘친중(親中) 연대’ 사이에서 수세적 지

위로 전략적 가치 하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의 회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외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배타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일본이 인도·태평양 담론에서 우세적인 위치를 점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동맹 내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좁힐 악수로 작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일본과 제로섬 경쟁을 하기보다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 등 대서양 세력이 이를 인도·태평양 시대에 대중견제를 겸한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협소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유엔사 및 후방기지 존치를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이 한반도 문제 개입 시 별도의 유엔 결의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 군사 작전 시 일본 내 7개 유엔사 기지를 사용할 명시적 권한을 보장받는다. 셋째,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¹¹⁵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를 적극적으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결국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및 해외주둔군 재배치 논의의 중심엔 한반도의 이익(대북역지)과 함께 미국의 세계 경영상 전략적 이익(대중견제)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이익구조 동조화를 위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 체제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13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114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 (4 Feb. 2021).

115 이재영, 김주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p. 53.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다양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쿼드 4개국에 영국, 프랑스까지 가세하면서 P5의 핵 화력이 올해 급격히 인도·태평양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가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서방국가들의 합동훈련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정부성명(2015.6.15)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침략자들의 전쟁 도박판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2021년 3월 24일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존 아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당시 지명자)이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적”이라 발언하여 북한의 우려를 사실상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직접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으로 북한 압박 도구 가능성을 언급한 바, 더더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해졌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 궁극적으로 한국에 군사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북한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한국도 반사적이라고는 하지만 군사적 대응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일탈에 대한 경계와 함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이 필요하다.

우선, 북미 간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안보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중

국,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지역 수준에서 군비 축소를 위한 협력책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쿼드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해양 전력이 근해에 집중됨으로써 북한이 불필요하게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력을 과시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8개국과 군사 부문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정치·경제·안보 부문 등에서 지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불안정성과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이 우발적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 길이라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양한 역내외 플레이어들이 인도·태평양에서 벌이는 다차원 전략경쟁으로 정작 역내 세력인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스스로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의 축소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추진에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그리고 두 정책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비관적 전망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유럽과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중견국 외교’ 강화를 통한 소다자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¹¹⁶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국제정치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영국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대서양 세력들에 의

116 한국의 외교 유연성 강화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김기정, 김정섭, 남궁곤, 이희욱, 장세호, 조은정,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2021).

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경쟁은 역사상 처음이 아니다. 즉, 이들은 역외 세력이지만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전략적 경험치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역내외 세력이 벌이고 있는 각축전의 정치, 경제, 안보적 긴박성이야말로 신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성공을 위한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가 처한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상기하고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유럽과 전략적 연대를 시도한다면 ‘반중 연대의 착시효과’를 통해 한국의 외교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Atlantic Powers' Indo-Pacific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Geostrategic Initiative

E.J.R. Cho

Yonghwan Cho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with an aim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various layers of South Korea's "structural entanglemen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ussia-Ukraine war have accelerated the global division of spheres of influence,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postwar order. In particular,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which began with trade conflicts, has gone beyond the separation of high-tech and supply chains

and expanded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fields, revealing patterns of an all-out war. The problem is that the Indo-Pacific region with the utmost geostrategic significance is wher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akes place. The U.S. has established the Indo-Pacific strategy, a geostrategic initiative to keep China in check, expanded the Pacific Command's area from the Asia-Pacific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changed its name to the Indo-Pacific Command. Furthermore, the U.S. formed the QUAD with Japan, Australia, and India, and in terms of economy, it is promoting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addition, the U.S. is pursuing a link between the Asia-Pacific regional alliance and the trans-Atlantic alliance. For example, the U.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launched the security pact AUKUS in 2021. Also, the 2022 NATO Summit invited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Aft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dismissed China's claim to exclusive rights to the South China Sea in 2016, European countries suppor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sent aircraft carriers to counter the

China challenge in the Indo-Pacific waters. The UK and France, NATO's key forces, have also moved eastward to keep China in check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addition to the UK and France, the so-called Atlantic forces, such as the Netherlands, Germany, Sweden, and Denmark, are showing increased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not only to keep China in check but also in preparation for the opening of the Arctic route following climate change. In other words, the Atlantic powers' preemptive response to Russia and China's interest in the Arctic route has prompted their enhanced involv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Based on such an analysis, the Atlantic powers' activit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ill likely become more active.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ssess if the Atlantic powers' strategic involv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a factor of crisis or opportunity for the country.

Keywords

geopolitical strategy, Indo-Pacific strategy, Atlantic powers, U.S., Europe, U.S.-South Korea alliance, South Korea-Japan relations, UNC-Rear, global pivotal state

참고문헌

- 강석울. “미국의 대한반도 주요 정책과 한미동맹 핵심 현안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전 문가 간담회: 미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대외정책 및 한미관계 핵심 현안 및 전망 발표문, file:///C:/Users/MissTea/Downloads/fileDownload2.pdf (검색일: 2022.9.21).
- 강수정.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의 지정학적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2.6.24),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618&mid=a&board_id=41&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9.2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권태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전략구상과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 전망.” 『전략논단』 제27호 (2018 봄·여름호), pp. 133-167.
- 권태환.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최종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 (2022.9.22) 발표문.
- 김기정, 김정섭, 남궁곤, 이희옥, 장세호, 조은정.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김소연, 권재범, 박성윤. “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4) (2021.10), pp. 35-66.
- 김석수. “인도·태평양 시대와 일본과 인도 관계.” 『일본연구』 제81호 (2019. 9), pp. 7-30.
-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33(2) (2018), pp. 265-300.
-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63(1) (2020.3), pp. 89-116.
-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서울: 청림출판, 2021.
- 박영석. “일본 주둔 미군기지 현황,” 『연합뉴스』, 2017년 12월 5일.
- 박원곤. “미국의 인도·태평양과 한미동맹: 통합역제와 전 세계 대비태세.” 『한국국가 전략』 제19호 (2022.7), pp. 29-58.
- 박원곤. “인태지역 내 한국의 동맹전략” 최종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 (2022.9.22) 발표문.
- 손한별·이진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한국국가전략』 제7호 (2018.7), pp. 149-188.
- 송재익.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의 재고찰.” 『주간국방논단』 제1008호 (2004. 8. 16),
- 송지선.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IFANS 주 요국제문제분석』 2021-4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12.8).
- 신각수. 최종현 학술원 “Deep Dive 워크숍 XI: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해양안보” (2022.9.22).
- 신성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제95호 (2018. 가을), pp. 9-26.
-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2) (2021.6), pp. 119-150.
- 오승희·박창건.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63(3) (2020.9), pp. 29-54.
-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 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22(3) (2019.10.31.) pp. 243-270.
- 이길성·전현석. “美 태평양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 바꿨다” 『조선일보』 (2018.6.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0182.html (검색일: 2022.5.4).

- 이명철 외. 『안보상황 변화가 유엔사 역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KIDA), 2009.
- 이수훈.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최종현학술원 DeepDive 세미나(2022.9.22) 발표문,
- 이우탁·김선한, “美, 태평양에 해공군전력 증강배치” 연합뉴스(2014.1.16). <https://www.yna.co.kr/view/AKR20140116078800009> (검색일: 2022.8.16).
- 이재영·김주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이재현.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15. 10.2). <https://www.asaninst.org/contents/%EC%9D%B8%EB%8F%84-%ED%8D%BC%EC%8B%9C%ED%94%BD%indo-pacific-%EC%83%88%EB%A1%9C%EC%9A%B4-%EC%A0%84%EB%9E%B5-%EA%B3%B5%EA%B0%84%EC%9D%98-%EB%93%B1%EC%9E%A5-2/> (검색일: 2022.9.7).
- 이조은.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팜 (2020.7.3).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congress-indopacific-deterrence/6032545.html (검색일: 2022.9.27).
- 임태훈·이은채. “독일의 인도·태평양 추진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영향: 양국 역내전략간 상호연계 및 보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4) (2022.6.), pp. 467-492.
- 장광현.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 서울: 굿프렌드정우, 2020.
- 장덕준. “북방정책 재고(再考):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재검토 미치 새로운 대륙지향 정책을 위한 원형 모색.” 『슬라브 학보』 32(1) (2017.3).
- 장호진.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8호 (2022.3), pp. 129-149.
-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2 (2021).
- 전혜원. “NATO 글로벌 파트너쉽과 한·NATO 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37 (2014.10.24).
- 전혜원. “한·NATO 협력 확대 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6-11 (2017.2.7).
-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20-4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12.15).
-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활동 동향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3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11.25).
- 정시내. “‘19조’ 미국 최첨단 항모 제럴드 R. 포드호 첫 전개.” 『중앙일보』 (2022.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012#home> (검색일: 2022.10.27).
- 조은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일 안보관계.” 『국제지역연구』 30(2) (2021 여름).
- 조은정.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122호 (2021.6.).
- 조은정. 『영국의 인도·태평양: 역사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 서울: INSS 연구보고서 (2022.2.).
- 조은정.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I): 지정학적 분석.” KIMS Periscope 285호 (2022.8.2).
- 조은정.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II): 위기인가 기회인가.” KIMS Periscope 286호 (2022.8.9).
- 조응래. “동북아 고속철도망 구상과 한중 해저터널.” 『교통기술과 정책』 6(3) (2009.3).
- 최영중.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30(3) (2022.8), pp. 121-143.
- 최진백.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21-5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12.30).
- 최현준. “중국, 솔로몬제도와 군사협력 추진...호주, 뉴질랜드 ‘화들짝’.” 『한겨레』 (2022.3.2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6678.html (검색일: 2022.9.21).
- 청와대. 2021년 한미정상회담 성명문 (2021.5.21).
- Allard, Patrick and Frédéric Grare. “European Trade and Strategy in the Indo-

- Pacific: Why the EU should join the CPTPP.”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mentary (1 Dec. 2021).
- Biden, Joseph R. “Renewing America’s Advantages: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 2021).
- Braithwaite, Kenneth J., Secretary of the Navy.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All-Domain Naval Power” (Dec. 2020). <https://media.defense.gov/2020/Dec/17/2002553481/-1/-1/0/TRISERVICESTRATEGY.PDF/TRISERVICESTRATEGY.PDF> (검색일: 2022.5.22).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The 2022 CNAS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Security in the Balance (virtual conference) (14-16 June 2022), <https://www.cnas.org/2022-conference-registration> (검색일: 2022.10.27).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19 Apr 2021).
- Criekemans, David. “A new regional ‘great game’ in and around Afghanistan?” <https://spectator.clingendael.org/nl/publicatie/new-regional-great-game-and-around-afghanistan> (검색일: 2021.9.11).
-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Sharpening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Jan. 2018),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검색일: 2022.4.3).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IPSR):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1 June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22.4.3).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Global Force Posture Review (GPR)” (29 Nov 2021).
- (US) INDOPACACOM. <https://www.pacom.mil/Organization/Organization->

Chart/ (검색일: 2022.5.1).

-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UK Accession to CPTPP: The UK’s Strategic Approach” (Apr. 2021).
- (German) Die Bundesregierung (Federal Foreign Office), “Leitlinien zum Indo-Pazifik”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2 Sep. 2020).
- European Commission.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2 Dec. 2020).
-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on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16 Sep. 2021).
-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16 Sep. 2021).
- European Commission. “State of the Union 2021” (Brussels, 2021).
-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China,” (2021.7.26.)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china/> (검색일: 2022.9.19).
- (Dutch)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13 Nov. 2020).
- (Swedish)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trategy for Swede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2022-2026” (17 May 2022).
- (UK) House of Lords, “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 (2018).
-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The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3).
-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s Defence Strategy in the Indo-Pacific” (2019).
-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2019-2025 Military Programming Law” (2019).
-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for an inclusive Indo-Pacific”(2019).
-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s Indo-Pacific

- Strategy” (2022).
- (Ita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talian Contribution to the EU Strategy for the Indo-Pacific”(20 Jan. 2022).
- Li, Chunding, Xin Lin and John Whalley. “Comparing Alternative China and US Arrangements with CPTPP”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orking Paper no. 26877 (Mar. 2020).
- NATO. “2022 Strategic Concept” (29 June 2022).
- Pant, Harsh V. “Why Italy should Reorient towards the Indo-Pacific and India?.” ORF Commentaries (18 Dec 2020).
- (UK) Prime Minister’s Office.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Mar 2021).
- (UK) Prime Minister’s Office. “PM Boris Johnson’s Speech in Greenwich” (London, 2020).
- PT’s IAS Academy. Comparing QUAD and AUKUS-Geopolitic’s new wordgames, <https://civils.pteducation.com/2021/09/Comparing-QUAD-and-AUKUS-Geopolitics-new-wordgames-Prelims-UPSCMainsGSIII-Essaypaper-TreatiesandAlliances-DefenceandMilitary-WorldPolitics-IndianPolitics-Foreign-Affairs-China-September2021.html> (검색일: 2022.8.16).
- Ronald R’Oourke. “Navu Ford(CVN-78) Class Aircraft Carrier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pdated on 25 July 2022) <https://sgp.fas.org/crs/weapons/RS20643.pdf> (검색일: 2022.8.9).
- Trump, Donald J.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7).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 (4 Feb. 2021).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INSS 연구보고서 2022-21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한석희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3년 2월
발행일 2023년 2월
편집 한국학술정보(주)
ISBN 979-11-92859-00-2
979-11-89781-79-8 (세트)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